

#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2011. 2



#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2011. 2

---

배정호(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박영호(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진하(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박재적(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기현(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배경 .....	2
1. 미·중의 주요현안과 배경 .....	2
2. 미·중 전략적 목적 .....	4
III.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특징 .....	8
1. 주요 내용 .....	8
2. 주요 특징과 전략적 의미 .....	10
IV.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관련국의 반응 .....	16
1. 미국 .....	16
2. 중국 .....	17
3. 북한 .....	18
4. 일본 .....	19
5. 러시아 .....	20

V.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	21
1.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의 선제적(proactive) 대응 .....	21
2.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한·중 전략적 정책협력 강화 .....	22
3. 북한 핵문제의 해결 촉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화 .....	23
4. 북한의 국면 전환 전술 차단 및 대북정책의 실효성 제고 .....	25

## 표 목 차

<표 Ⅱ-1> 미·중 갈등의 주요 현안과 양국 입장 .....	3
<표 Ⅲ-1>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	9
<표 Ⅲ-2>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 주요 발언 .....	10





## I. 문제제기

- 미·중 양국은 무역마찰, 위안화 절상,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견,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의 대립과 더불어 갈등을 빚었음.
- 이에, 미·중 양국은 갈등과 대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1997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Hu Jintao) 국가주석은 2011년 1월 14년 만에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미·중 정상회담(1.20)을 가짐.
- 미·중 양국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의 협력적 파트너십 문제, 대만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이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총 41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 미·중 정상회담은 향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전략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미·중 정상회담의 배경, 주요 내용, 전략적 의미 등을 분석하고, 미·일·중·러·북한 등의 언론 보도의 분석을 통하여 관련국의 반응을 살펴본 뒤,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함.

## II.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배경

### 1. 미·중의 주요현안과 배경

- 2010년에는 각종 현안에서 미·중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관계가 악화됨.
  - 구글(Google)의 중국 사업 철수, 무역마찰, 위안화 절상 갈등,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 선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견,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양국의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
- 따라서, 미·중 양국은 갈등과 대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예컨대,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마찰과 충돌로 인해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향후 경제발전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또한, 미국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중국 위협론이 새롭게 각인되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 불필요한 대국굴기(大國崛起)의 이미지 도출보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로 회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
- 미국 역시 동아시아 전략환경에서 ‘한·미·일’ 대 ‘중·북·러’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짐.

- 미·중 갈등 구도의 핵심에 있는 주요 현안과 이에 관한 양국의 입장은 <표 II-1>과 같음.

**<표 II-1> 미·중 갈등의 주요 현안과 양국 입장**

	미국	중국
미·중관계	중국의 패권적 행태 경계	한·미·일 동맹 구도 강화 우려
대만 관련 사항	하나의 중국 정책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반대
인권 관련 사항	인권은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보편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은 주권 사항</li> <li>· 타국의 인권문제 제기는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위반</li> </ul>
핵비확산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li> <li>· 이란 및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저지 노력</li> </ul>	북한 UEP의 실체가 확인이 안됐다는 입장 견지
환율 관련 사항	위안화 절상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달러 중심의 세계 통화 체제 반대
한반도 관련 사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한 중국의 영향력 발휘 기대	미국이 한국의 남북 대화수용을 압박해, 남북대화 재개 나아가 6자회담 재개 기대

## 2. 미·중 전략적 목적

### 가. 미국의 전략적 목적

#### (1) 외교·안보적 목적

- 미·중 관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서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함.
  - 2011년 미국의 주요 외교 일정(7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개시, 10월 중동협상, 12월 이라크 철군 완료)의 성공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국민에게 미완의 성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를 통해 핵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취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핵 비확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바, 핵 비확산 정책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함.
  - 중국의 핵탄두 수 공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금지조약(FMCT) 등에 대한 전향적인 협력자세 필요.
    - \*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 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한 이래,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 핵탄두 수 공개, 핵안보정상 회담 개최,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 협상 타결 등 일련의 정책 추진
    - \* 오바마 행정부는 CTBT의 상원 비준을 관철시킬 의지를 표명

## (2) 경제적 목적

- 위안화 절상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함.
  - 2010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였는데, 경기침체, 10%에 가까운 실업률, 정부 재정 문제가 주요한 원인.
- 따라서, 2012년 대선을 준비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게 지적 재산권 보호, 시장 개방 확대, 환율 개입 중단 등을 요구·압박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음.
- 미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전부터 중국을 압박하였는데, 티모시 가이스너(Timothy Franz Geithner) 재무장관은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고려할 때 중국이 위안화를 연 10%가량 절상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중국을 압박하였고,
  -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중국을 겨냥한 ‘환율조작국 제재’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중국을 압박.

## (3) 한반도 문제

- 미국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함.
  -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 국방장관, “북한이 향후 5년 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개발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월터 샤프(Walter L. Shap) 한·미연합사령관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미국이 이를 타격할 수 있다고 언급.

- 유엔제재 등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유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함.
- 따라서,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련, 중국의 역할과 협력을 촉구·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함.

## 나. 중국의 전략적 목적

### (1) 외교·안보적 목적

- 미국과의 대립구도 지속에 따른 부담으로 협력관계 복원을 기대함.
  - 신냉전구도 강화와 ‘중국 위협론’ 확산에 대한 부담.
-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함께 추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제쳐 두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전략을 유도하고자 함.
  - 대만, 티베트, 신장위구르 문제 등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호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요구,
  - 남중국해 영토분쟁,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글로벌 이슈 등 비전통 안보문제와 인적교류에 대해서는 협력관계를 확보.
-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은 미국을 통하여 한국에게 남북대화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유도함.
  -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주도권 회복

- 중국은 남북대화에 의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분위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일 전략적 협력의 완화를 유도함.

## (2) 경제적 목적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미·중 협력구도의 구축과 더불어 공통의 이해를 공유함.
  - 중국의 최대 목표인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신 냉전구도의 타파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환경 조성은 필수적 사항.
- 위안화 환율절상, 무역불균형 문제 등과 관련, 미국의 요구·압박 등에 대해 중국은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 (3) 국내정치 차원

- 중국 지도부의 권력 전환기에 대외환경 불안은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안정적 권력이양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함.
-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지위에서 미국에게 할 말은 하면서, 협력구도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G2의 모습을 연출함.
  - 후진타오 주석의 치적으로서 국내정치 활용.

### Ⅲ.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특징

#### 1. 주요 내용

- 1997년 장쩌민 국가주석 이후, 14년 만에 중국 최고 지도자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함께 정상회담(1.20)이 개최됨.
  -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만난 것은 양자회담과 다자 정상회의를 포함해 여덟 번째,
  - 후진타오 주석의 재임 중 미국 방문은 지난 2006년 4월 이후 두 번째이나 국빈 방문은 처음.
  
- 양국 정상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미·중관계 강화, 인권, 군사관계, 고위급 교류 확대, 글로벌 이슈, 한반도 문제, 경제 파트너십, 민간교류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총 41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표 Ⅲ-1>과 같음.



**<표 III-1>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p align="center"><b>미중관계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 역할 환영</li> <li>·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지역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환영</li> <li>· 고위급 교차방문</li> </ul>
<p align="center"><b>대만관련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관계에 있어 대만 이슈의 중요성 강조</li> <li>· 중국은 대만 이슈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 문제임을 강조</li> <li>·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름을 확인</li> <li>*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관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음.</li> </ul>
<p align="center"><b>인권관련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이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란 점 강조</li> <li>· 중국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li> <li>·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이전에 양국 간 인권대화 재개 합의</li> </ul>
<p align="center"><b>핵비확산체 제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 없는 세상의 구현과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강화</li> </ul>
<p align="center"><b>환율관련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위안화 환율 개선 및 환율 유동성을 증진하며, 경제발전모델의 지속적 변화</li> <li>· 양국은 미래지향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li> </ul>
<p align="center"><b>한반도관련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은 최근 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데 대해 우려</li> <li>· 양국은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고 명시</li> <li>·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li> <li>· 양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관련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 반대</li> <li>·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 촉구</li> </ul>

- 미·중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은 <표 III-2>와 같음.

**<표 III-2>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 주요 발언**

	오바마대통령	후진타오주석
인권문제	2010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의 석방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늘 인권 옹호에 노력해왔다고 반박</li> <li>· 그러나 중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해야 할 것이 많음을 인정</li> </ul>
환율문제	중국 정부가 환율시장에 강압적으로 개입해 위안화의 평가절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	중국은 시장에 바탕을 둔 환율시스템으로 움직여 가겠다고 원론적 응답
한반도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어야 함을 강조</li> <li>·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부각시킴</li> <li>· 북한의 UEP는 비확산에 관한 국제법 의무 위반임을 강조</li> </ul>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며,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2. 주요 특징과 전략적 의미

### 가. 동북아 전략환경 차원

-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액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미·중 간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구성·가동.
-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였으며, 그에 따라 ‘책임 있는 대국’(responsible powe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음.
- 미국은 경제 문제에서뿐 아니라 비확산체제 강화 등 안보 문제에서도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
  - 그러나, 중국은 미국은 ‘세계최대선진국’인 반면 자국은 ‘세계최대발전도상국’으로 자처.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G2 국가로서의 위상을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실질적으로도 중국이 G2 국가로서 세계 경제 및 경제·정치·안보질서에 대한 도전 해결하는 데 미국의 ‘핵심적인 협력 대상자’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함.
- 중국은 세계질서 주도국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이익 및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동 지역의 안정·평화·번영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함.
- 아·태 국가로서의 미국의 지역 평화·번영·안정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
- 미·중 관계는 동아시아 및 지구적(global) 차원의 현안을 협의하고 협력이 가능한 관계로 변화해왔는데, 이번 공동성명은 이러한 ‘전략적 협력’ 관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한층 가시화하였음.

- 미국은 경제회복 및 세계질서 주도국으로서의 위상 회복에, 중국은 지속적 경제발전을 통해 미국에 상응하는 대국으로의 성장에, 상대방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공동성명은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 21세기 기회와 도전을 다루기 위해 상호 존경과 혜택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노력,
  - 안보, 경제, 사회,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 그러나 미·중간에는 중국의 인권, 위안화의 인위적 조정, 지적재산권, 무역 역조, 군사력 증강,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북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바,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면서 우선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갈등과 협력’의 전략적 이해관계.
  
- 아·태지역에서는 핵·기타 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의 비확산, 핵안보 강화, 질병 및 빈곤 퇴치, 기후 변화 등에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미·중 양국이 공통의 이익을 중심으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함.
  -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의 발전 강조.
  
- 북핵문제 등 북한의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미·중 모두 한반도 긴장완화의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고,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UEP)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일정한 정도 수용하고, 미국이 중국 측의

긴장완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함.

-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과 그에 대한 한·미 연합훈련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봉합.

○ 미·중 양국은 9.19 공동성명 및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환경의 조성과 이를 위한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중용함.

○ 그러나 미·중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함.

- 중국 외교부장 양제츠(楊潔篪)는 정상회담 성과 평가(1.22)에서 ‘북핵문제’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중요 국제문제들과 ‘조선반도정세’ 논의 언급,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연설(1.26)에서 북한이 핵무기 포기 약속이행을 재강조.

○ 결국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중 관여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보여주면서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한·미 및 미·일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지만, 향후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이는 한·미 및 미·일 동맹관계의 강화와 상호 충돌할 수도 있음.

## 나. 남북관계 차원

- 41개 항의 선언문 중 한반도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제18항은, 8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41개항 중 가장 긴 조항임.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도 표명.
- 최근 사건(recent developments)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데 대해 우려를 표시함.
  - “최근 사건들로 촉발된”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긴장 고조의 책임을 모호하게 남겨둠.
  -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연평도 도발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채 “최근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국의 주장을 반영.
- 남북 간 군사적 갈등과 우라늄농축 시설 공개로 재연된 북핵문제 등의 난제에 대한 양국정상의 해법은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6자회담의 조건부 재개’라는 절충안임.
  - ‘비핵화는 6자회담으로, 6자회담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진정성으로부터’라는 결자해지의 공식 명시.
- 미·중은 대원칙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합의하면서,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실질적으로 Resolution 1695, 1718 및 1874를 지칭)’을 구체적 준거의 틀로 제시함.
  - 미·북 직접 협상이 아닌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
- 미·중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과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6자회담 조기재개(early resumption)

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데 합의함.

- 한국측 원칙이 미국을 경유하여 표출 된 것으로 외교적 개가로 평가,
- 향후 남북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진정성 있는 또는 건설적인 조치’라는 기준은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미국무부 터너(Mark C. Toner) 부대변인 대리는 진정성·구체성의 기준은 결국 한국 측이 정의할 사안이라는 견해를 피력.  
\* 한국 정부도 2011년 1월 10일 통일부대변인 논평 형식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및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북한이 (실재를) 주장하는’이라고 에둘러 표현하였지만, 미·중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양측의 공동 우려사항으로 명기하였음.

- 한국과 미국 측 주장대로 북한 UEP 문제를 유엔안보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 중국 측으로부터 부분적인 양보를 얻어내어 일종의 대북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데 전략적 의의가 있음.

## IV.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관련국의 반응

### 1. 미국

- 미국 언론은 전반적으로 ‘할 말은 했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의 결여로 인해 성과는 제한적’라고 평가함.
  - 경제문제와 관련, 중국이 보잉사와 GE 등으로부터 450억 달러에 달하는 물품의 수입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실익을 얻었다고 평가하면서도,
  - 지적 재산권, 대중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 미국 내 아시아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양함.
  - 미·중 대립관계를 개선시킬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고문),
  - 공동성명이 북한의 우려에 대한 우려를 담아낸 것은 성과라고 평가(롬버그 스티븐연구소 연구위원),
  - 공동성명에 선(先) 9.19 공동성명 준수 등 6자회담 재개 조건이 애매하다고 비판(클링너 해리티지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 미·중 정상회담 후, 미국 정부는 대만과 한국 정부에게 금번 미·중 정상회담이 대만과 한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함.
  - 미국 재대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의 버가르트(Raymond F. Burghardt) 의장은 공동성명 내용이 대만의 이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



- 필립 크롤리(Philip J. Crowley)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단지 대화만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 정상 회담 직후,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한국이 수용한데 대해, 로버트 기브스(Robert L. Gibbs)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해석함.
  - 중국이 북한의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해석.
- 미국 의회는 인권 문제 및 위안화 절상 문제에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함.
  - 국민만찬에 존 베이너(John Boehner) 미국 연방하원의장 불참,
  - 냉랭한 분위기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의회 방문.

## 2. 중국

-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매우 호의적이고 긍정 일변도로 평가함.
  -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열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협력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평기평좌:平起平座).
- 특히,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 대해 화려한 국민만찬을 베푼 것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중국의 국제 사회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것이라고 평가함.

- 일부 전문가들도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양국은 협력적 질서를 구축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 동북아지역에서 향후 10년간 중·미관계의 설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낙관(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 비록 양국 정상이 환율, 인권 등 여러 안전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양국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북한의 UEP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진창룡 인민대 교수).
- 그러나 중국 언론 및 전문가들의 호의적 평가가 중국 정부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언론 통제와도 관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방송에 대한 검열 통제 시스템을 가동해 후진타오 주석의 인권 관련 발언 등을 통제,
  -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등 긍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보도를 하는 반면, 환율과 중국 시장개방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보도 및 평가를 자제.

### 3. 북한

-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미·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은 한국측 요구에도 일정 수준 응하는 듯 모양새를 취하면서, 신속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
- 공동성명 발표 후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은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해 옴.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데 대하여” 라고 의제를 명시하며,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안.

#### 4. 일본

- 일본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하였음.
- 일본 언론들은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책임을 갖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지만, 중국 내 인권문제와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의 두드러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평가함.
  - 그러나, 인권문제가 향후 전반적인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일본 언론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이 공동성명을 통하여 북한의 UEP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지만,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소극적 자세를 보였고, 따라서,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함.
  -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UEP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한반도 문제의 접근과 관련, 미·중이 남북대화의 진전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대책의 도출이 없음을 지적.

## 5. 러시아

- 러시아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자 현안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다루어진 것은 미·중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함.
-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회담 결과는 미·중 정상이 일정 정도의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함.
  -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온 중국이 북한의 UEP에 대해 미국과 함께 우려를 표시한 점,
  - 한국의 동맹인 미국이 이전의 입장을 바꿔 대결이 아닌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은 양보이며 타협의 산물.
- 러시아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를 촉구한 것은 6자회담 등을 포함한 다자협상 재개의 사전 행보로 볼 수 있음.
  - 향후 몇 개월 안에 남북대화과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
- 러시아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V.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 1.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의 선제적 (proactive) 대응

-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문제들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및 일정한 역할의 수행을 촉구하면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관여(engagement)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확인시켜주었음.
  - 대중 관여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의 증대를 고무함과 동시에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견제.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1970년대 초 남북대화를 촉발시킨 미·중 비밀협상에 비해서는 상대적 비중이 떨어지지만, 동아시아지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이 일정한 정도 인정하였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음.
- 한국은 북핵문제 등 북한문제에 대한 대처 및 향후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및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의 의중·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 따라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및 통일전략의 관점에서 중국의 역할과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발전에 대한 선제적(proactive) 대

응이 필요함.

-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한·미 고위전략 협력 채널 강화,
- 미·중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과 한·미 동맹의 발전 및 한국의 통일정책이 상호 선순환의 영향을 주도록 하는 전략 강구.

## 2.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한·중 전략적 정책협력 강화

- 중국은 6자회담을 북한 비핵화보다는 동북아지역의 긴장 완화 메커니즘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 정상회담 결과 평가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드러남.
  -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나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6자회담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추구,
  -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의 우선순위는 ▲안정된 지역안보환경 유지, ▲북한의 생존 보장, ▲중국 동북지방(동북3성)의 경제발전 지원, ▲장기적으로 북한 항구를 통한 서태평양 진출.
- 중국은 국내안정을 위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시, 이를 위한 중국 주변의 안정과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사활적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외교정책의 기반은 이러한 정치안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
- 따라서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일 협의과정과 북한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 전략의 진행을 보면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다시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임.

- 한국은 기존 대북정책 노선의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함.
- 한국은 향후 미·중의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 속에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자국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한·미 동맹 및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변수를 활용하는 균형화(balancing) 전략을 추진할 것에 유의해야 함.
  - 한국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및 이에 토대를 한 대중 전략의 수립.
- 중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 및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북한의 UEP에 대한 우려 표명 등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야 함.
  -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이번 UEP 우려 표시 역시도 미국의 압력에 따른 양보의 결과.

### 3. 북한 핵문제의 해결 촉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화

-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UEP에 우려를 표시하는 등 북한 비핵화에 무게를 실어 준 것은 긍정적 신호이나 중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않으며 불투명함.
  - 중국 중심의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진행된다면, 한국의 정책 입장(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 및 한·미·일 공조에 입각한 6자회담 재개추진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미·중 공동성명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중국과의 협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호재임.
  - 한국은 이를 적극 활용하는 외교력을 발휘하여 주도적 역할을 강화.
  
-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6자 회담이 재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측에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군사회담 등 남북대화와 직접적인 연계를 할 필요는 없으나,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과 6자회담이 상호 순기능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
  
- 미·중의 북한의 ‘UEP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을 기반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UEP 문제의 UN 안보리 상정을 추진함.
  - 북한 UEP 문제가 이란의 우라늄고농축프로그램과 함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대한 중대 도전임을 부각.
  
- 6자회담 등에서 한·미·일의 공조를 공고화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되었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과 같은 3국간 대북정책 조정회의를 다시 설치·가동함.
  - 한·미·일 공조의 공고화와 한·일의 전략적 협력의 강화.
  
- 6자회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6자회담이 북·중 대 한·미·일의 구도로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위한 협력을 강화.



#### 4. 북한의 국면 전환 전술 차단 및 대북정책의 실효성 제고

- 미·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에서 보듯이,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배경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환경 조성을 추구할 것임.
- 북한의 전면적 대남 대화공세는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적 구축, 경제 난국 탈피 등을 위해서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지속, 한국 정부의 원칙적 대북노선 등을 변화시키는 국면 전환의 전술적 목적이 강함.
  - 따라서 한국은 대북정책을 군사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 비핵화 진정성 파악 등 북한의 정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북한은 한국 정부의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 조건을 형식적 수준에서 충족시키면서, 남북 군사회담 등 남북대화를 ‘절차상의 징검다리’로 활용하려는 ‘맞춤형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됨.
  - 2월 중순 이후 개최될 전망인 군사회담에서는 군사적 도발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사과 수준 및 재발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 측과의 타협을 유도하는 전술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과정에서 NLL 문제, 천안함 사건 재조사 등을 제기하고, 사과의 수준과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한국 측에 긴장의 책임을 전가하는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 있음.
- 북한은 한국 측이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면, 남북대화 결렬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선에서, 부분적으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의 전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대미 및 대남 공세적 외교 등,
-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미공조의 강도와 대북정책 원칙 및 정책 추진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지 않도록 특히 유의.

○ 따라서 한국은 군사회담 등 남북 대화 및 관계 개선에 임하는 자세와 의지를 확고히 정립하고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확약, 비핵화의 의지 구체화 등 한국의 요구 사항을 북한 측에 뚜렷이 각인
- 북한 측의 사과 수위 결정 및 재발 방지 조치의 수준과 관련, '가시적으로 검증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되도록 추진.

○ 특히, 한국은 북한 측이 NLL의 이슈화, 서해평화지대 설치 제안 등으로 물 타기 시도를 할 경우를 대비, 이를 진정성 없는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북한 측에 사전 주지시켜야 할 것임.

-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도 원칙의 문제에 관한 한, 양보의 소지가 거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주지시키는 데 외교적 역량을 결집.

○ 북한이 '진정성 있는' 협조적 자세로 나올 경우, 한국은 남북관계의 주도적 역할에 기반 호혜주의, 비례성 및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발전 및 진전을 위해 다방면에서의 협력 전략 추진을 준비함.

- 남북대화의 진전 이후, 6자회담 재개로 다자협상이 전개되는 과

정에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한편, 남북회담 결렬상황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협상 국면에서 극단 전술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북한의 또 다른 도발 징후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한·미 안보 공조 강화와 함께 자체 방위 및 위기관리 능력의 극대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충분히 확보.
  - 북한 문제에 관련,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데 각별한 노력.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통일정세분석 2011-02

---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전화 : 02-901-2527 팩스 : 02-901-2543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1년 2월
발행일	2011년 2월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